

# IMF체제하에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

하 헌 구(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 서 론

민자유치에 의한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및 민간에 의한 시설운영은 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완비된 선진국의 경우에는 운영의 효율화나 국지적 공급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개도국들은 성장애로 요인의 타개를 위한 시설공급부족의 해소와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운영에의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소득이 전체 산업자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의 24.3%에서 1987년의 22.5%로 낮아지고 있다. 즉, 교통부문의 자본소득 증가율은 11.9%였고,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소득에서 차지하는 교통부문의 비중이 1977년의 48.8%에서 1987년의 38.1%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개발원(IMD)의 '95년 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 수준이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가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는 최근 우리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비용, 비효율구조와 이에 따

른 경쟁력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교통부문별로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1996년~2004년의 투자소요액은 총 364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재정여력은 241조원에 불과하여 전체소요액의 1/3정도인 123조원은 재정차입이나 민간자본유치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sup>2)</sup>

이러한 사정에 따라 정부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95년~'97년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거 40건의 사업을 제시하여, 총 34조6,400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민간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자유치의 이득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며, 공공부문의 재정으로는 부족한 SOC투자재원을 확대하고, SOC시설의 공공재적 성격감소로 인한 민간부문의 사업영역확대로 정리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민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IMF체제하에서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민자유치환경 변화를 살펴본후

1) IMD(1995),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참조.

2) 교통개발연구원(1995), 「21세기 선진국진입과 통일대비를 위한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계획안」과 교통개발연구원(1996), 「고속도로 건설의 민자유치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영개선방안」, 참조.

민자유치의 활성화 및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여 보도록 한다.

## 2.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IMF 체제의 민자유치에 대한 영향

### 가. 민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민자유치대상사업이 제시되고 있다. 1997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고시된 사업은 총 40개이고, 이들의 총사업비는 34조6,400억원에 이른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된 총 40개 사업 중 착공된 사업은 4개(인천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신공항급유시설, 열병합발전소) 뿐이고 인천신공항화물터미널사업은 '98년 5월에 착공예정이며 5개 사업(부산가덕도신항만, 대구~대동고속도로, 경인운하사업, 인천신공항기내식, 지상조업장비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상태이다. 또 4개 사업(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중부 ICD)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중이고 2개 사업(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추진대책을 마련중이다. 이 중 동서고속철도, 의정부경전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전~당진고속도로, 구미~옥포고속도로 6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지정되지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시설사업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민자유치사업은 활발히 추진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97년말부터 시작한 외환위기에서 촉

발된 IMF관리체제는 SOC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환경을 이전과는 판이하게 변화시켰다.

이제 IMF관리체제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자.

### 나. IMF체제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영향

저성장과 경제의 구조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민자유치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가지의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인 측면은 자본시장 자유화 및 효율화에 따른 재원조달여건의 개선과 주로 관련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로 인한 대출여건 악화, 민간기업의 부채·자본비율 축소, 상호지급보증 감소 등으로 인한 민자사업 참여 여력의 감소 등이다.

#### (1) 경제환경변화의 긍정적인 영향<sup>3)</sup>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해외자본시장과 국내 직접·간접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보다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먼저 국내 직접금융시장중에서 주식시장 개방을 살펴보면, '97년말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50%까지 확대하였고, '98년말까지는 이를 5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기업공개요건인 설립연수 5년의 경과규정이 완화되면 민자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회사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함으로써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활성화될 수 있게 되었다. 채권시장의 개방확대방안을 살펴보면, 국공채 및 금융채를 포함한 상장특수채, 단기회사채 등에 대하여, 국공채의 경우 채권종류별로 30%까지, 특

3)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주로 자본자유화의 확대에 의한 재원조달여건의 개선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는 '98년 2월 발표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대부분 자본자유화와 관련되는 것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채의 경우 회사별로 30%까지, 또 회사채 투자한도를 외국인 개인별 한도를 폐지하고 한도관리방식도 종목별 관리에서 회사별 관리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능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내직접금융시장의 대외 개방확대는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공급확대로 이어져 민자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직접금융시장의 대외개방확대가 민간자본유치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 및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신인도 회복 등이 전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신인도 회복에 의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환율의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간접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또 선진적인 금융기법 등이 도입되면 은행이나 연금·기금 등은 SOC 민자사업에 투자할 여력이나 능력이 커질 것이다. 즉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부문의 전문인력이 증가하고 또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선진적인 금융기법이 도입되면 수익성이 높은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경쟁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여건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이 '98년말까지는 3년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용도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그리고 또 외화증권의 발행을 통한 해외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상업차관도입의 경우와 비슷한 조건으로 허용된다. 이것도 자금조달여건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 회복이라는 전제조건이 중요한 점이다. 또 대기업의 출자금액제한의 폐지도 민자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부정적인 영향

경제환경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긴축정책에 의한 고금리의 지속, 재원규모의 감소 등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여력감소, 대기업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감소, 부채·자본비율 축소 등으로 인한 민간 대기업의 민자사업 투자여력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고금리현상이나 재원규모 감소 등은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지만,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 축소, 부채·자본비율 축소 등으로 인한 민간기업 투자여력 감소 등의 문제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다.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의 지속 등의 문제는 이미 착공되었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이 끝나서 착공직전에 있는 민자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즉 고금리에 따른 사업비의 증대와 수입원자재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고환율에 따른 사업비증대 등은 민자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3.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여건의 개혁방안

앞서 논의한대로 IMF관리체제가 끝날 때까지는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SOC민자사업의 축소와 공공투자의 감소는 전반적인 SOC투자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물류비증가와 실물생산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대량실업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SOC투자부문은 소비와 다른 투자부문에 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부문이므로,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여러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공공 SOC투자 감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실업대책과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총 SOC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자유치의 목적인 민간효율성의 공공부문에의 도입은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의 경제구조 조정이라는 현재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SOC민자유치의 활성화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 가. 외국기업과 자본의 적극적 유치

### (1) 외국기업유치의 필요성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해외의 SOC투자기업과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가 큰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국내기업만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도 단일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함으로써 경쟁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의 SOC사업 추진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해외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해외기업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기업 참여의 장점은 첫째로 SOC시설에 대한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고, 둘째로 국

내기업과의 경쟁촉진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 셋째로 해외자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외환시장의 장기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 (2) 외국기업유치의 장애요인<sup>4)</sup>

그동안 해외기업의 유치가 부진했던 요인을 살펴보면 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 정부의 규제, 정치·사회·문화적 장애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국내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로 임금, 금리, 지대, 물류 등 생산요소의 고비용이 심하다는 점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더 급격히 상승한 임금 및 노동부문의 경직성, 해외차입의 제한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상호지급보증 등 불합리한 국내 금융관행, 기술인력확보 애로, 유통시스템의 후진성 등이 고비용구조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비용구조는 자본자유화의 확대, 금융구조의 개혁 등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제도적 장애요인으로서 정부의 규제를 들 수 있다. 우선 각종 법규가 모호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관련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는 결국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관련 법률 및 회계자문에 따른 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과도한 정부 규제는 관련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번역작업과 외국 모기업과의 문외작업을 가중시켜 비용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

셋째, 정치·사회·문화적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국내기업활동에 있어서의 부패관행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불투명성 및 부조리 등은 외국투자자에 대해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심각한 투자장애요인으로

4) 김준동·김관호·왕윤중(1998),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제2권 제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작용하고 있다. 또 원칙이나 합리적인 경제원리에 의하지 않고 혈연, 지연, 학연 등 인적관계에 의해 일이 처리되는 성향이 많은 유착자본주의(Crony Capitalism)와 의사전달문화상의 차이는 신규진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SOC부문을 외국기업이 경영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외국기업투자의 긍정적 기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외국기업참여 활성화 방안<sup>5)</sup>

이상의 장애요인하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SOC민자유치사업 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개혁의 가속화, 인식의 개선, 외국기업유치·홍보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첫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의 가속화가 필요하다. 국내의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선은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문제와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금융개혁 등 국내 제도의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세법 등의 법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꾸어 자의성 및 부패관행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규제와 합리화를 통해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중요하다.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고비용구조의 개선 및 규제개혁과 더불어 국내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즉 누가 소유하는 기업이라기 보다는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우리 경제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 언론기관, 일선 공무원 및 일반 국민에게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홍보하여 배타적 사회분위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경제개혁의 가속화와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의 SOC투자 전문기업들에게 우리의 SOC투자 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자유치관련 법률 및 제도, 민자유치기본계획, 민자유치사업별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안내책자를 매년 작성하여 외국의 투자기업에게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외국투자기업들에게 민자유치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민자사업 관련제도가 잘 정비되었음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민자유치제도의 합리화<sup>6)</sup>

앞서 논의하였듯이 외국자본과 기업을 민자유치사업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IMF체제하에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자본과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현행의 민자유치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자유치제도의 개선은 외국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사업 자체

5) 전계서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하현구·박규영(1997), 「SOC 민자유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참조.

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실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제도는 민자유치촉진법과 시행령, 매년 발표되는 민자유치기본계획 그리고 여타 관련 법률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자유치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다. 즉 민자유치사업은 공공부문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측면보다는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훨씬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의 개선도 효율성의 증진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 컨소시움에 의한 독점적 참여는 일반재화시장에 독점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먼저 대상사업의 선정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익율규제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의 민간투자비의 10%(사업시행자 이윤 CR)로 고정되어 있는 수익율의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수익율과 최초 사용료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부의 과감한 재정참여나 지원이 중요하다. 수익성이 낮거나 사업규모가 큰 경우 정부가 과감하고 사전적인 재정참여나 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유인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의 민간부문이나 민관합동법인의 참여만을 인정하는데서 벗어나서 공공부문 즉 도로공사나 철도청 등이 단독입찰을 허용하고 해외의 사업시행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경쟁을 활

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위험분담을 사전에 명확히하고 위험분담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공사비 등 여러 비용항목들의 사후정산을 금지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기본설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설계단계부터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후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제시된 사업비의 일정비율이상은 증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실시협약체결이후의 공사비절감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익증대는 사업시행자의 이윤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획일적인 BTO (Build-Transfer-Operate)와 BOO (Build-Own-Operate) 방식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BOT, BLT (Build-Lease-Transfer), ROT (Rehabilitate-Operate-Transfer), CAO (Contract-Add-Operate)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 민자유치전담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현재의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은 개별사업별로 새로운 팀을 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축적 및 활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영국이나 필리핀 등 민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민자유치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전문인력들이 민자유치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4. 결 론

이상으로 IMF체제하에서의 민자유치활성화의 필요성과 그것을 위해서는 외국자본과 사업시행자들

7) 경쟁은 성격상 동일시장내에서의 경쟁, 시장참여를 위한 경쟁, 대체재와의 경쟁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 상품시장이론에서의 경쟁은 동일시장내에서의 경쟁을 의미하고 민자유치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경쟁은 시장참여를 위한 경쟁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경쟁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민자유치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외국자본과 기업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유치의 장애요인인 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 정부의 규제, 정치·사회·문화적 장애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경제개혁의 가속화, 외국자본이나 기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 각종 공식적·비공식적 규제의 합리화,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강화 등이 필수적이다. 이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지만, 민자유치제도를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부문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이의 방안으로는 수익율규제의 폐지, 정부의 과감한 사전적인 재정참여 및 지원, 해외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유치, 공기업의 단독참여 허용, 위험분담의 체계화 등을 들었다.

그리고 공사비 등 여러 비용항목들의 사후정산을 금지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의 유인을 주어야 하고, 민자유치의 형식을 다양화하며, 민자유치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민자유치추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시사용어해설

### < 데킬라 효과 >

멕시코에는 국민주(酒)로 통하는 데킬라란 술이 있다. 알코올 40도의 독한 술이다. 경제학에 등장하는 '데킬라 효과'는 멕시코 외환시장 악화로 발생한 경제위기가 브라질 등 이웃 남미국가에 번진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태국은 바트화 폭락에 따른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지난해 7월 IMF(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했다. 태국의 외환위기는 주변국가들로 번졌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투자자들이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 한 나라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주변국가에 대한 투자까지 거둬들이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남미의 데킬라 효과에 대비해 '바트효과'라고도 한다. 지난 4월 일본에서도 전면적인 외환자유화를 포함한 일본판 빅뱅으로 주가와 환율이 동반하락하는 사태가 생겼다. 일본의 위기가 계속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낀다.